

당헌 개정안 의결...국힘 새 비대위 출범 잔걸음

상임전국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최고위원 4명 사퇴 비상상황 규정
오늘 전국위 열어 개정안 최종 의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당 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것을 명확하게 고친 것이다.

법원이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고치고 새 비대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력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위원장 권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과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당헌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 재석 55명에 참석 인원은 36명으로, 중간에 4명이 자리를 떠났다.

박형수 원내대표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 대표 권위 시 비대위 전환 권한 문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임명 주체 문제 등 질문이 나왔다.

또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 대표 권위 시 비대위 전환 권한 문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임명 주체 문제 등 질문이 나왔다.

또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치기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의당 비례 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반대 59% 부결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이 당원총투표에서 부결됐다.

정의당이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데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

이번 당원총투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권고안이 부결됨으로써 해당 의원들을 향한 사퇴 압박은 그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결과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당원총투표 발의에 나섰던 당원들, 찬반 의사를 밝힌 모든 당원들의 혁신과 재창당의 필요성,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요구를 깊이 통감하고 무겁게 받아안겠다"면서 "정의당을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단은 이날 총투표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오전 총투표 부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가부 결과를 떠나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원단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 투표에 대한 의원단의 입장을 내일 기자회견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총 1만8000명의 당원을 상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사퇴 권고안' 당원총투표를 실시했다.

'의원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투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정당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오광록 기자 kroh@

권성동 "민주당, 광주시민 염원 짓밟나...복합쇼핑몰 좌초 위기 입장 밝혀라"

야, 호남행 겨냥 "위기직면하면 어김없이 광주 방문 지지 읊소"
강기정 시장 "쇼핑몰 순항 중...정부·여당 지원책 무엇인가" 반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열심히 노력 중인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광주 복합쇼핑몰은 순항 중"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올해 여러 기업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역시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민주당 읊소

로위원회,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같은 정치인까지 합세하면서 좌절됐다"며 "민관협의회 요구는 5년 전과 같은 시민단체의 반대 투쟁을 반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민주당은 광주 자치단체장과 시·구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시민단체와 협잡해 광주 시민의 염원을 짓밟을 건가"라고 되물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할 테니 국비 9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업시설 하나 유치하는데 세금 9000억원이 소요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광주에

투자하겠나"면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방해한다면, 저희는 투자자사를 밝힌 기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방문해 광주를 자신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언급하면서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민주당은 위기에 직면하면 어김없이 광주를 찾는다. 립서비스해대며 지지를 읊소한다"며 "지금 광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합쇼핑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태풍 '힌남노'에 초긴장하며 대응 노력 중인데, 뜬금없이 권성동 대표가 '광주 복합쇼핑몰'이 좌초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미 투자사 중 현대(백화점)와 신세계측은 투자자의

를 밝혔고, 다른 투자사들도 고심 중에 있으며 광주시도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관련 진행 과정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이자, 지역 공약인 광주 복합쇼핑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 고맙겠다"면서 "제가 권성동 대표에게 요구한 9000억원의 금액이 많다면 그럼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까지 포함시킨 만큼 단순한 민간투자자 아닌 정부와 여당의 지원 대책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광주 투자는 광주시의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전략적으로만 이용하지 말라는 일점으로 해석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윤덕 '청와대 보존법' 발의 심의위 설치·관리청 지정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4일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주민 대표가 포함되는 민주적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하도록 했다.

또 5개년 보존·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활용된 '소파 광고', '보그 화보' 등으로 촉발된 출몰 개방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